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3호 2022. 10. 4.(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6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1
-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2

예 규

- 목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67
- 목포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93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고시 제2022-16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불 입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불 입 >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41-38	2022. 10. 4.	건물 철거 예정
2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 17-1	2022. 10. 4.	건물 철거
3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11번길 11-1	2022. 10. 4.	건물 철거
4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11번길 11-2	2022. 10. 4.	건물 철거
5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11번길 11-3	2022. 10. 4.	건물 철거
6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11번길 14	2022. 10. 4.	건물 철거
7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21번길 3-3	2022. 10. 4.	건물 철거

목포시 공고 제2022 - 1569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4.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세징수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수유예 관련 법규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조항에 마을세무사 업무를 추가하여 각 호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가 및 각 호 신설 (안 제6조)

- 1)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각 호를 신설함

○ 지방세 징수유예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1) 업무의 범위 (안 제33조제3호)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 2) 징수유예 등 신청(안 제38조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예산사항 (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5. /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세정과 업무 조정 협의 완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0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조례 제 호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
3.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제38조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 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u>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u>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 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u> 2. <u>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u> 3. <u>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u>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 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3조(업무의 범위)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u>제25조의2</u> ----- -----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u>제25조의2</u>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2-1576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9.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제목 변경 및 제1항 신설 등
 - 조문 제목 변경 : (기존) “재산의 증감 및 현황”
⇒ (개정)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 제1항 신설 :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항 개정 : “영 제52조”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로,
“현재액”을 “현황, 현재액”으로 개정
- 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 위임사항 반영
 - (기준금액) 취득 1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 (기준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제목 변경 및 용어 등 일부 개정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조문 제목 및 각 조항 변경
(안 제19조 ~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32조~안 제3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및 제92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9. 입법예고 : 2022. 9. 29. ~ 2022. 10. 20.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참고 사항 : 해당없음

12.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0일까지 목포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1), 직접방문 등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회계과(☎061-270-3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로, “현재액”을 “현황, 현재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의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각 호의 외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신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현황, 현재액----- ----- -----.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예산을 의회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 2----- ----- ----- ----- ----- -----.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의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말한다.

3. 취득의 경우 : 10억원

4.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3.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4.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

--.

② -----
-----사용
허가-----.

제20조(사용허가)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 무</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 과금의 사용자 부담</p> <p>7. (생략)</p> <p>제20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u>사 용·</u> <u>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u>)</p> <p>1. ~ 2. (생략)</p> <p>3.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 을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p> <p>제21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 치</u>)</p> <p>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 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p> <p>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p>	<p>5. <u>사용허가</u></p> <p>6. <u>사용허가</u> ----- -----</p> <p>7.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u>사용 허가</u>할 수 있는 경우</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사 용허가</u>-----</p> <p>제21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p> <p>-----<u>사용 허가부</u>----- ----- --.</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p> <p>① ----- ----- ----- ----<u>사용허가</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	--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
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
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

----- 사용허가

-----.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허가-----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사용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용허가-----

-----.

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허가(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생략)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⑤ -----

-----사용허가-----

-----.

⑥ (현행과 같음)

1. -----

-----사용허

가-----

2. -----

-----사용허

가-----

3. -----

-----사용허

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적용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용허가-----

-----.

제35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
-----사용허가-----

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공고 제2022-1590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4.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자치법규(조례)에 규정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요청이 있어 우리시 조례의 경쟁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4조제1항 중 “경쟁제한” 문구 개정 (안 제4조)
 - (기존) 지역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 ⇒ (개정) 지역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5. /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일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23),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 ① 지역업체는 <u>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u> ,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 ① 지역업체는 <u>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u>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2-1594호**입 법 예 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4.

목 포 시 장**1. 개정 이유**

-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신설
- 하수도 배출량 재산정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타당성 제고
- 기타 조례 규정상 미비점 개선

2. 주요 내용

- 하수도 배출량 재산정 신청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개정(안 제25조제1항제1호)
-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항제5호)
-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 과태료 관련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2호~제9호 서식)

3. 관련 법규

- 「하수도법」 제6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6.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04. ~ 10. 25.[21일간]****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9. 예산사항 : 별첨****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일까지 목포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56),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061-270-8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생계 및 의료수급권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2**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0조의2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u> <u>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u> <u>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u> <p><u>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u></p> <p><u>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p>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
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
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생계 및 의료수급권자

2.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제25조 (감면 등) ①-----

-----.

1.----- 기
초생활수급자

2. ~ 4. (현행과 같음)

5. 목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고,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삭제>****처 분 사 전 통 지 서(제28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시까지	

목 포 시 장 (인)**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제2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목포시 상하수도행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제28조제2항 관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div>	
목포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제29조제3항 관련)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 처분	법인명 (시설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div>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29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시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 태 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p> <p> 년 월 일</p>			
목 포 시 장(인)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제29조제3항 관련)

제 호

주 소 :

성 명 :

과태료납부 통지번호	고지금액	취소 (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제30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번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원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하수도법」제80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목포시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삭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30조제2항 관련)				
제 호				
수 신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발 신 : 목포시장(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1. 「하수도법」 제80조 제 항과 관련입니다.</p> <p>2. 「하수도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한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③생년월일	
	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 일자	
<p>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끝.</p> <p>목 포 시 장</p>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illegible]

붙임 3**예산사항****「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 개정·신설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금 감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감소

나. 추계의 결과 :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은 286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다. 재원조달방안 : 감소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은 시비(일반회계 부담금)로 충당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장 김광호

【 연도별 비용 추계 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86,628	-300,959	-316,006	-331,806	-348,396	-1,583,795
하수도 사용료 수익	-286,628	-300,959	-316,006	-331,806	-348,396	-1,583,795
세 출	286,628	300,959	316,006	331,806	348,396	1,583,795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용	286,628	300,959	316,006	331,806	348,396	1,583,795
재원 조달	286,628	300,959	316,006	331,806	348,396	1,583,795
일반회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86,628	300,959	316,006	331,806	348,396	1,583,795

목포시 공고 제2022-1595호**입 법 예 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4.

목 포 시 장**1. 개정 이유**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 기타 시행규칙 규정상 미비점 개선

2. 주요 내용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다를 때 신고 시 제출서류 및 기준 구체화(안 제8조)
- 기초수급자 감면기준 규정 신설(안 제19조제6항)
- 다자녀가구 감면기준 규정 신설(안 제19조제7항)
- 요금감면 중복적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 일반회계 전출금 보전 규정 신설(안 제19조제9항)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정비

3. 관련 법규

- 「하수도법」 제6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4. 개정 규칙(안) : 별첨**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6.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04. ~ 10. 25.[21일간]****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9. 예산사항 : 해당없음****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일까지 목포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56),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061-270-8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시행규칙 제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제19조에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월 하수도요금에서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3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⑦ 조례 제2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하수도 요금의 15%를 감면한다.

⑧ 하수도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을 것을 적용한다.

⑨ 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제6호서식, 제13호서식,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제5조제1항제1호----- ----- ----- ----.
② (생략)	②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③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u><후단 신설></u>	④ 제3항----- -----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u><신설></u>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u><신설></u>	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u><신설></u>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
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이하 생략)

-----.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례 제25조 제1항1호에 해당하
는 자는 월 하수도 요금에서 3톤
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
만 3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
한다.

⑦ 조례 제25조 제1항5호에 해당하
는 세대는 하수도 요금의 15%를
감면한다.

⑧ 하수도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
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감면 규
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
면율이 높을 것을 적용한다.

⑨ 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
5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
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의2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양 수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모타규격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능력	톤/ H		
	양수능력		톤/ H	기 타			
신 고	용 도						
	사용기간						
내 용	사 용 량	일 간	톤	월 간	톤		
	비 고						
<p>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목 포 시 장 귀 하</p> <p>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p>							

[별지 제6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감 수 량	제 품 종	단 위	월간 생산량	물 함유량() 비율 %	물사용량 ()	기타 감수량 ()		
하수도 사용량	용수증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p>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목 포 시 장 귀 하</p> <p>첨부서류 : 1. 입증서류</p>								

[별지 제5호의2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양 수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모타규격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능력	톤/ H		
	양수능력		톤/ H	기 타			
신 고	용 도						
	사용기간						
내 용	사 용 량	일 간	톤	월 간	톤		
	비 고						
<p>「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목 포 시 장 귀 하</p> <p>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p>							

[별지 제6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감 수 량	제 품 종	단 위	월간 생산량	물 함유량() 비율 %	물사용량 ()	기타 감수량 ()		
하수도 사용량	용수증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p>「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목 포 시 장 귀 하</p> <p>첨부서류 : 1. 입증서류</p>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p>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동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귀 하</p>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이의신청서					
사용자	소 재 지				하수번호
	상 호 명 령				성 명
이의신청내용	년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이의신청					
<p>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귀 하</p>					
첨부서류 : 증빙서류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p>「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귀 하</p>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이의신청서					
사용자	소 재 지				하수번호
	상 호 명 령				성 명
이의신청내용	년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이의신청					
<p>「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귀 하</p>					
첨부서류 : 증빙서류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총당) 통지서						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 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부)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이 자		
					일 자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총당후장액 (환부액)			
총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총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총당총액			총당후의 미 납 액			
<p>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인)</p> <p>※ 참고 : 하수도사용료제시행규칙 제30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						처리기한 즉 시	
수 신	목 포 시 장						
관리자의성명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p>위의 과오납금이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자 성명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right;">생 년 월 일 : _____</p>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영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영 수 자 성 명 (인)</p>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총당) 통지서						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 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부)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이 자		
					일 자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총당후장액 (환부액)			
총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총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총당총액			총당후의 미 납 액			
<p>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인)</p> <p>※ 참고 : 하수도사용료제시행규칙 제2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						처리기한 즉 시	
수 신	목 포 시 장						
관리자의성명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p>위의 과오납금이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자 성명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right;">생 년 월 일 : _____</p>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영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영 수 자 성 명 (인)</p>							

목포시 공고 제2022-1598호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건축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반영
-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 삭제

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건)

- 조례 시행일 이전의 기존의 건축물 완화 규정 제한(안 제4조제6호)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2006년8월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소 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제한
- 가설건축물 중복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19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항 변경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로 변경 및 “3. 야외 흡연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중복 조항 삭제

□ 건축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5건)

- 목포시 의견 반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에 대한 내용 반영(안 제5조제1항제9호)
 - 도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또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여건들의 상황에 따라 목포시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회의 개최 기능 필요
- 목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 완화(안 제5조제2항제1호)
 - 건축위원회 재심의 기준 명확하게 규정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을 “증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변경(안 제22조제1항)
 -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을 용도변경대상 건축물로 변경
 - 6.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변경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범위(안 제23조제1호)
 -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범위 현실화를 위한 조정
- 도로의 지정(안 제27조)
 - 도로와 관련하여 사유 도로의 재산권 주장 등의 민원 증가 추세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세부화

□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반영(1건)

-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변경(안 제33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

□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 조례가 상충 되는 사항 삭제(2건)

-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은 건축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와 상충 되어 삭제
 -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2.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
 - 건축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의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6.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
-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 조례가 상충 되어 삭제(안 별표 2 제1호 바.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조례 [별표 2]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 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7.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4. ~ 25. (21일간)**8.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25.까지 목포시장(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0),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건축행정과)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축행정과(전화 : 061-270-8050, FAX : 061-270-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5조제2항제1호 중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을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3. 야외 흡연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삭제**한다.

제20조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신축신고 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18.12.17.>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바닥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 <신설 2018.12.17.>”는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대상 건축물”로, “6.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은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한다.

제23조 중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시간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를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시간 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업무 대행 : 10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설계도서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3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로 한다.

제27조는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2호 이상의 마을 진입도로 2. 하천제방 길”을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 포장된 통로
3. 제방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및 주변현황
2.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연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
3.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4.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한다.

제33조제4항 “영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는 “영 제86조제3항제2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 바목 중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행	개정안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 (생략)</p> <p>1. ~ 5. (생략)</p> <p>6.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p> <p>7. (생략)</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수직으로</u> 증축하는 경우</p> <p>7.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치 및 기능) ①(생략)</p> <p>1. ~ 8. (생략)</p> <p>9. <신설></p> <p>② (생략)</p> <p>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p>	<p>제5조(설치 및 기능) ①(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u></p> <p>② (현행과 같음)</p> <p>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p>

<p>위반되지 아니할 것</p> <p>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p>	<p>위반되지 아니할 것</p> <p>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증가되지 않는 경우</u></p>
<p>제19조(가설건축물)</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야외 흡연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p>	<p>제19조(가설건축물)</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건축신고 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p> <p>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p> <p>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바닥면</p>	<p><u><삭 제></u></p>

<p>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p> <p>3. 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p>	
<p>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생략)</p> <p>1. (생략)</p> <p>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p> <p>3. ~ 5. (생략)</p> <p>6.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p> <p>7. (생략)</p>	<p>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p> <p>3. ~ 5. (현행과 같음)</p> <p>6. 법 제14조에 따른 신축신고 대상 건축물</p> <p>7. (현행과 같음)</p>
<p>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생략)</p> <p>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시간</p> <p>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p>	<p>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현행과 같음)</p> <p>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u>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시간</u> <u>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업무 대행 : 100퍼센트</u></p> <p>2. 건축허가사항 변경(건축 설계도서 변경)을 위한 현장조</p>

100퍼센트	<u>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u> <u>30퍼센트</u> <u>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u> <u>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u> <u>퍼센트</u>
<p>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p> <p>1. 2호 이상의 마을 진입도로</p> <p>2. 하천제방 길</p>	<p><u>제27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u> <u>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u> <u>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u> <u>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u> <u>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u> <u>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u> <u>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u> <u>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u> <u>와 같다.</u></p> <p><u>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u> <u>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u> <u>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u> <u>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u></p> <p><u>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 포</u> <u>장된 통로</u></p> <p><u>3. 제방도로</u></p> <p><u>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u> <u>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u> <u>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u> <u>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u></p> <p><u>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u></p>

	<p><u>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및 주변현황</u> <u>2.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연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u> <u>3.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 저촉여부</u> <u>4.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u>
<p>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생략)</p> <p>① ~ ③ (생략)</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p>	<p>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현행과 같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u>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
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
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
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
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
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는 0.5배) 이상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30조 관련)</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p>가. ~ 마. (생 략)</p> <p>바. 그 밖에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미터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 묘지관련 시설 : 4미터 이상 	<p>[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30조 관련)</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그 밖에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미터 이상 ·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 묘지관련 시설 : 4미터 이상

목포시 예규 제27호

목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2 년 09 월 2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포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직자(이하 “공직

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 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시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 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④ 공공기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시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시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시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

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는 제1항의 조사·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공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수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시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

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시는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시는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고 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수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9]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목포시장 귀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input type="checkbox"/> 내부 공익신고자		<input type="checkbox"/> 외부 공익신고자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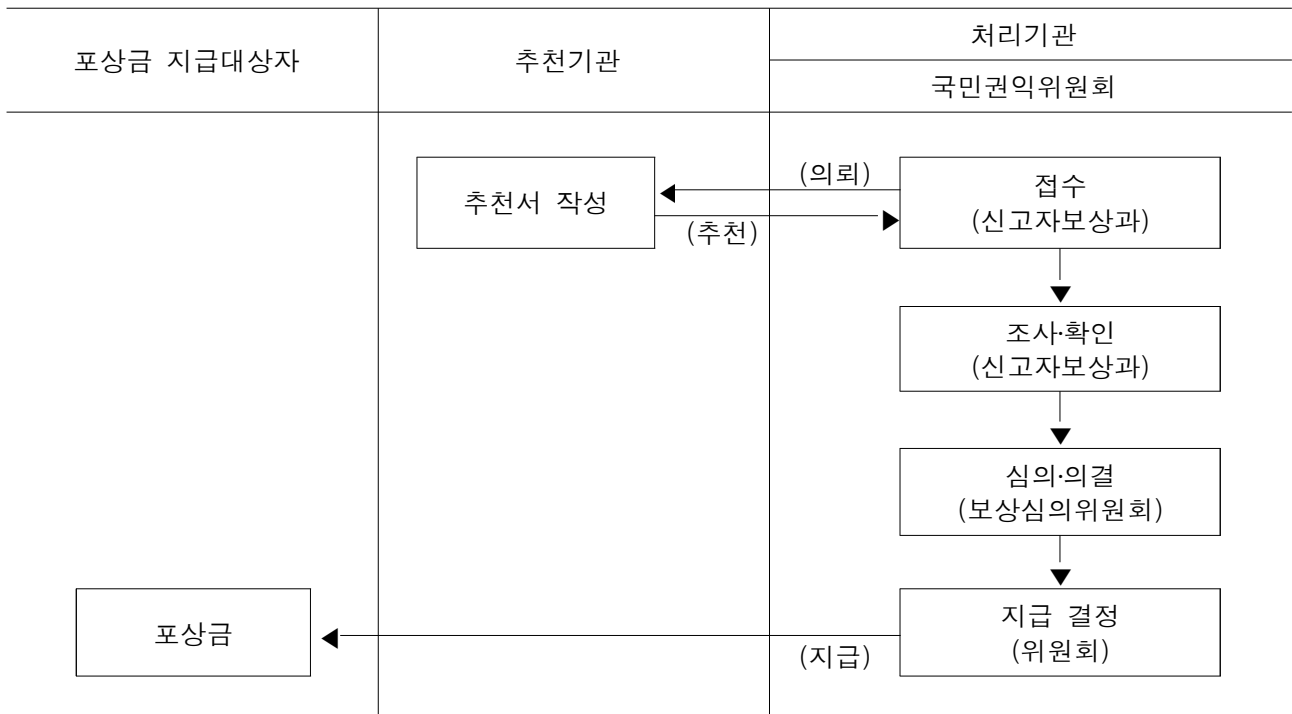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목포시 예규 제28호

목포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2 년 09 월 2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시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에서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시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시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 7. 5.부터 시행한다.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2]

부 패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2 - 00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제호
접수일자 20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목포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제호
접수일자 20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목포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5]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소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내부 신고자		[] 외부 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 없음	(기관명 :)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금액 :)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p>				